

#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차별출산력의 분석\*

유삼현\*\*

이 논문은 제2차 출산력변천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관념, 노동시장 불안정성, 가족형성을 결정요인으로 저출산 인과구조의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자료는 2005년 센서스와 동태통계, 200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은 GIS를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구·시·군별 분포를 지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을 위해 분산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낮추는 부적관계를, 가족형성은 출산력을 높이는 정적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을 매개로 출산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력 저하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에서 양성평등 관념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대도시 지역에서 초저출산 현상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저출산(low fertility), 출산력변천(fertility transition), 지역별 차별출산력(regional fertility differentials), 양성평등(gender equity), 노동시장(labor market), 가족형성(family formation)

## I. 서론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총출생아수는 43.8만 명이며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2004년의 1.16명보다 0.08명 감소했다(통계청, 2006). 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선진국 수준의 저출산 단계에 진입하였고,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세계에서 출산력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8-BS0004). 필자는 논문의 초기 단계부터 불명료한 부분과 오류를 지적하며 도와주셨던 김두섭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그 분의 조언을 통해 이 글의 많은 부분이 수정·보완되었음을 밝힌다.

\*\*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연구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구 선진국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른바 초저출산 현상은 출산력이 대체수준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출산력변천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출산력변천은 1960년부터 1985년까지의 제1차 출산력변천과 1985년 이후 현재까지의 제2차 출산력변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Kim, 2005). 제2차 출산력변천에서 사망력은 제1차 출산력변천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출산력은 대체수준 이하로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인구이동과 사망력 저하가 제1차 출산력변천의 주요 요인이었다면, 제2차 출산력변천은 주로 장기화된 경제불황, 청년실업 증가, 초혼연령의 상승, 개인주의 등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Kim, 2005).

특히 초저출산 경향을 제2차 출산력변천으로 설명하려는 최근의 연구에서 혼인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양성평등 관념에 관한 논의가 강조되고 있다(Davis, 1986; Chesnais, 1996; McDonald, 2000; Atoh, 2001). 이 같은 논의들은 초저출산 현상을 주로 형식적·제도적 측면의 양성평등과 실질적 측면의 양성평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두섭(2005)이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 모형에서 노동시장의 변화,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을 출산력 저하의 세 가지 결정요인으로 언급하고 세계화와 이에 수반하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이 세 가지 결정요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제2차 출산력변천에 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관련 변수들의 측정이 곤란하여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최근 출산력 저하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대도시 지역의 초저출산 경향이다. 전국 광역시의 인구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45%를 차지하지만,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2005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0.92명과 0.8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통계청, 2006). 사회경제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때 거주지에 따라 여러 사회적 현상들의 차별성이 부각된다. 대도시 지역은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변화를 비교적 빠르게 경험하고 있으며, 차별적 사회현상들이 확인되고 있다. 교육수준과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대표하는 지표가 나머지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도시 지역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성이 초저출산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것은 인구현상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제2차 출산력변천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를 검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던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지역수준의 양적자료를 이용한 경로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해 보

고자 한다. 또한 최근 크게 개선되고 있는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 II. 제2차 출산력변천의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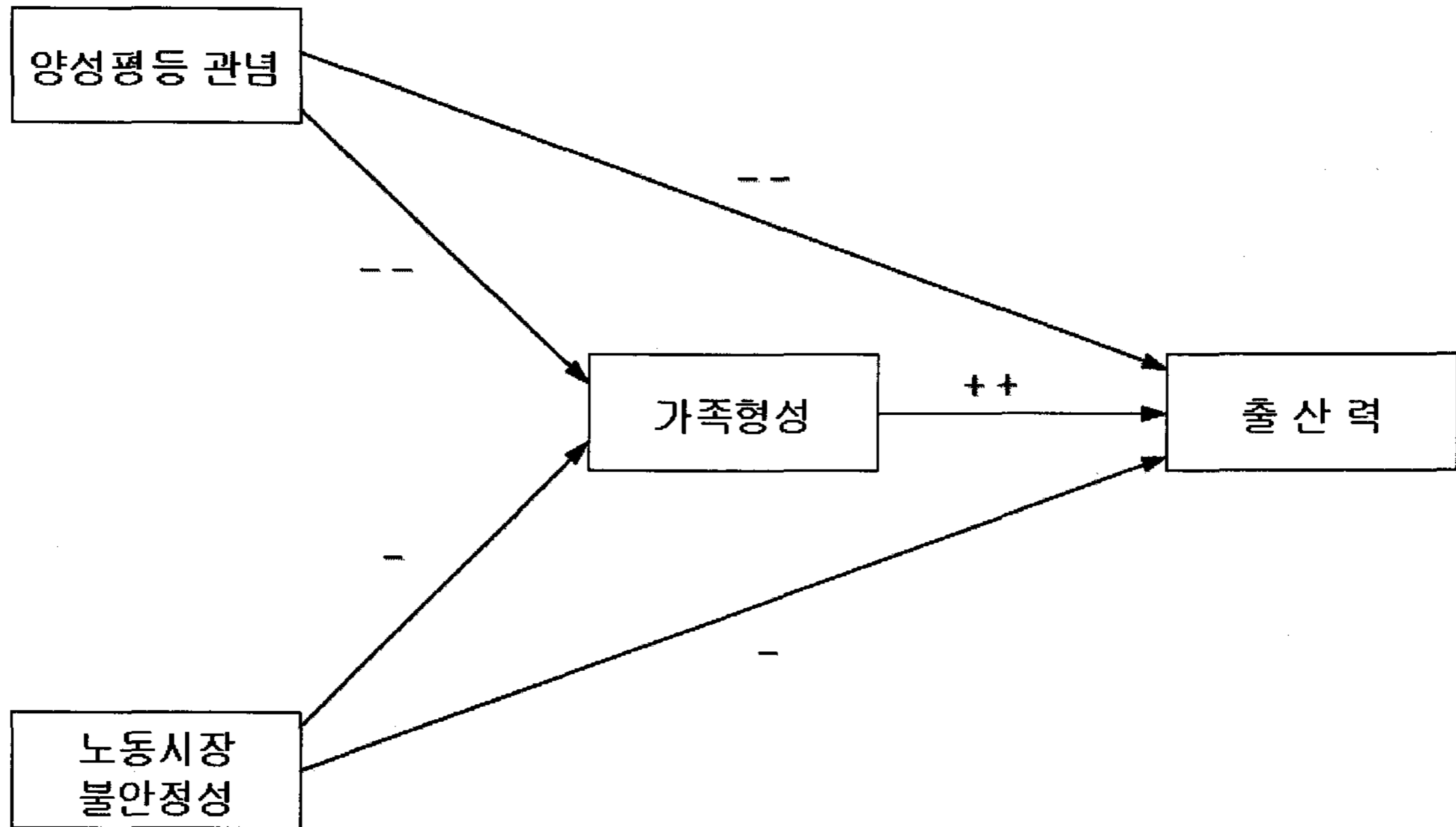
이 논문은 제2차 출산력변천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 그 인과구조를 이론적 모형으로 제시한 김두섭(2005)의 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그의 이론적 모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하였다.

제2차 출산력변천의 주 결정요인으로 판단되는 양성평등 관념, 노동시장 불안정성, 가족형성으로 분석모형을 구성하였고 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분석모형은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가족형성과 출산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가족형성은 출산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이 분석모형은 제2차 출산력변천에서 양성평등 관념이 상대적으로 큰 흐름을 형성하며,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이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김두섭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1980년대 이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1980년 22.9%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4년에는 79.7%선으로 크게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1980년 42.8%에서 2004년 49.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6).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양성평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담론화되면서, 각종 관련정책들이 시작되었다(장원규, 2003). 대학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면서 여성의식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987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여성개발 부분이 포함되었다. 이후 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최근 성 주류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기본권 확보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노력이 증진되고 있다. 아직 많은 부분에서 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의 지위 향상은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에 따른 가치관 및 태도가 변화가 그 밑바탕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Chesnais(1996)는 개발국가에서 양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는 반대로 양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이를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 paradox)’라고 하였다. 또 한 때 비슷한 수준의 저출산 국가였던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대비를 통해 서유럽의 초저출산을 여성의 지위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림 1> 제2차 출산력변천의 인과구조 분석모형



주: 이 연구모형은 김두섭(2005)이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McDonald(2000) 역시 저출산의 원인은 임금, 고등교육의 성별차이 등 개인지향적 제도(individual-orientation institution)와 가구 내 성별분업 등 가족지향적 제도(family-orientation institution)간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개인지향적 제도에 비해 가족지향적 제도의 양성평등 정도가 낮은 국가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 역시 이들의 주장처럼 출산 및 혼인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 즉 양성평등 관념의 확대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경제 활동 참가를 포함한 사회적 참여 역시 크게 늘면서 초혼연령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혼전 성관계, 혼인, 출산, 이혼을 대하는 태도 역시 전통적 가치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성적 차별이 존재하며, 특히 가족 내 성역할(gender role)에 있어서 여성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은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일 또는 자아실현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내 전통적 성역할에 모두 힘써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혼인 및 출산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이러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양성평등 관념의 확대는 전통적 성역할의 거부 또는 회피를 촉진하여 초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양성평등 관념(gender equity orientation)을 양성평등을 지향하려는 태도 및 가치관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출산력변천에서 전반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어 왔다. 개인의 경제적 지위나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출산력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최근 한국에서 높아지고 있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출산력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청년실업의 증가는 고학력 실업자 양산과 함께 사회의 진입 시기를 늦추게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질수록 혼인 및 출산 역시 쉽게 결정하기 힘들어진다. 다시 말해 청년실업과 임시 및 일용직비의 증가는 혼인적령기 젊은이들이 혼인 및 출산을 연기 또는 회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저출산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경향을 미시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 입증하고 있다(김태현 외, 2005; 이삼식 외, 2005; 김두섭·송유진, 2006). 이 논문은 노동시장 불안정성 역시 제2차 출산력변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 10년에 해당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양성평등 관념 보다 다소 밑에 두고 있다.

가족형성의 시기와 정도, 그리고 그것의 해체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출산력의 중간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한국처럼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나라에서는 출산에 대한 가족형성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성별 평균초혼연령은 1990년 남자 27.8세, 여자 24.8세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 현재 남자 30.9세, 여자 27.7세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6). 초혼연령의 상승은 가족형성 시기는 물론 출산 시기까지 늦추게 함으로서 출산력 저하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가족형성의 시기가 늦어지거나 쉽게 해체되고 있다. 가족형성이 출산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널리 인정되므로 중간변수로서 저출산 인과구조의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세계화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는 김두섭의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화와 사회경제적 변화가 제2차 출산력변천의 전제가 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각 지역수준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세계화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을 추가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고, 김두섭이 제시하였던 세계화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모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은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곳으로 세계화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활발해진 국제교류를 통해 대도시 지역주민들의 사고 및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실업률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 교육수준은 타 지역과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좀 더 다양한 가치관, 더 불안한 노동시장은 가족형성을 저해하고 출산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도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저출산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의 초저출산은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영향력이 다른 곳에 비해 더 크기 때문으로 가정하였다. 대도시 지역의 저출산 인과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집중적으로 해부하고, 다른 지역의 출산력 향방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요약하면 이 논문은 양성평등 관념, 노동시장 불안정성, 가족형성의 세 가지 결정요인으로 저출산 인과구조의 분석모형을 구성하였고, 이들의 차이에 의해 지역의 출산력 차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대도시 지역의 초저출산은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

### Ⅲ. 자료 및 연구방법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의 2005년 현재 전국 구·시·군 234개 지역의 출산력이다.<sup>1)</sup> 제2차 출산력변천의 주요 결정요인인 양성평등 관념, 노동시장의 변화, 가족의 형성과 해체를 개인 등 미시적 수준(micro level data)에서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에서는 인구동태통계, 센서스,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등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가용한 자료들을 부분적으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분석단위는 개인이 아닌 지역이 된다. 지역수준의 거시자료(macro level data)를 활용한 횡단적 분석은 종단적 분석에서 명확히 하기 어려운 관계를 밝히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자료와 변수의 조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이 연구는 출산력 수준을 최종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출산력 수준은 총출생아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등 관련 변수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연령구조를 통제한 합계출산율이 적합하다. 최근 통계청에서는 통계정보시스템(KOSIS)을 통해 지역별 합계출산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력 수준은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2005년 지역별 합계출산율을 사용하였다.

양성평등 관념의 측정은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는 1995년 유

1) 분석에 사용된 지역 '구·시·군' 중 '구'는 광역시에 속한 '구'만을 포함하며, 그 밖에 중소도시 내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에 포함시켜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ex.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고양시). 분석에 사용된 '시' 역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Beijing)’를 계기로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국가별 양성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와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를 발표하고 있다. 양성평등지수는 국가별로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여성권한척도는 여성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그리고 남녀소득차를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양성평등지수가 교육, 소득, 수명에 관한 것으로 형식적 양성평등을 의미한다면, 여성권한척도는 여성의 활동과 참여도를 측정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한 연구(문유경 외, 2005)가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마땅히 사용할만한 지표는 없는 실정이다.

분석에 사용된 양성평등 관념은 유엔개발계획에서 발표하는 양성평등지수의 측정과정을 고려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새로이 생성하였다. 고등교육은 합리적 사고와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적 불평등 및 불균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성에 의한 사회적 차별 및 불평등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고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수준의 성별 대졸이상 학력구성비를 확인하는 것은 상대적 교육수준을 어느 정도 상쇄한 상태에서 양성평등 관념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녀 각각 만 20세 이상 인구를 분모로 성별 4년제 대졸이상학력 구성비를 계산하였다. 이것을 다시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로 계산하여 양성평등 관념으로 사용하였다. 현실적으로 여성이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남성을 분모로, 여성을 분자에 놓음으로써 교육 분야를 통해 양성평등 관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이 평등한 수준을 의미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는 1.00을 넘는 지역은 없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실업, 해고, 임시 및 비정규직으로 대표된다. 최근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관련연구의 주요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등 경제 관련 자료는 현재 전국 시·도 단위 이하로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200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서 ‘종사상의 지위’ 항목을 사용하였다.<sup>2)</sup> 일반적으로 임시 및 일용직비는 임금 근로자 중에서 임시직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를 합한 비를 통해 계산하지만, 이를 지역수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임시 및 일용직비의 분모로 임금 노동자를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집계에서 배

2) 이 논문의 분석대상은 2005년이지만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의 경우 가용한 최근 자료가 2004년이었다.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에서는 ‘임시직 노동자’를 근로계약 1년 미만의 노동자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사용된 자료

변수	실제 사용변수	변수의 조작	자료
양성평등 관념	성별대졸구성비의 비	$\frac{\left( \frac{\text{여성 대졸학력이상 인구}}{\text{만 20세 이상 여성인구}} \right)}{\left( \frac{\text{남성 대졸학력이상 인구}}{\text{만 20세 이상 남성인구}} \right)}$	2005센서스
노동시장불안정성	임시 및 일용직비(로그값)	$\log \left( \frac{\text{임시 및 일용직 노동자}}{\text{만 20세 이상 인구}} \times 100 \right)$	2004사업체 노동실태현황
가족형성	유배우비	$\frac{\text{만 20-49세 유배우 인구}}{\text{만 20-49세 인구}} \times 100$	2005센서스
출산력 수준	합계출산율(TFR)	합계출산율(TFR)	2005동태통계

제된다. 그러나 이들이 부수입 등을 목적으로 임시 및 일용직에 종사하게 된다면 집계에 포함되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향된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각 지역의 임시 및 일용직 노동자를 임금 근로자가 아닌 해당지역 인구로 나눈 백분율을 계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 이렇게 계산된 임시 및 일용직비가 선형성(linearity)의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로 자연대수(natural logarithm)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가족형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우선 유배우율과 초혼연령을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가족의 해체를 나타내는 변수로 미혼율과 이혼율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초혼연령의 경우 성별의 문제가 있으며, 미혼율과 이혼율은 그 비중이 작거나 측정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가족형성 변수는 가장 보편적인 유배우율을 사용하였고, 그 대상을 출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만 20-49세 인구로 제한하였다.

이 논문은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확인하고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고, 분석을 위해 고안된 양성평등 관념의 적합성을 합계출산율에 대한 산점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비롯한 각 변수의 지역 간 차이와 분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GIS를 이용하여 각 변수의 분포 지도를 제시하였다. GIS는 지역적 특성과 영향력에 관한 정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아울러 주요변수들을 값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합계출산율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경로분석은 여러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특정화하여 논리적으로 명확한 설명을 가하는 것으로 일단의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linear relationship)를 분해하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인과적 가설(causal hypothesis)의 검증에 흔히 이용된다(김두섭·강남준, 2000:331). 따라서 양성평등 관념, 노동시장 불안정, 그리고 가족형성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인과구조를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을 달리하여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의 인과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구·시·군 234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대도시 지역의 초저출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국 구·시·군 234개 지역에서 광역시에 해당하는 69개 '구'지역을 '대도시 지역'으로, 나머지 165개 지역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울산 울주군 등 5개 지역은 비록 행정구역상 광역시에 속하지만, 해당지역을 대도시로 간주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기타지역으로 포함시켰다.

#### IV. 분석결과

##### 1. 기초통계량 및 자료의 검토

여기에서는 종속변수를 포함한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량을 확인하고, 양성평등 관념으로 사용된 자료를 검토하였다. 우선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기본적인 속성을 검토하여 그 값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각 지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15명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보다 다소 높다. <표 2>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서로 다른 인구를 가진 지역의 합계출산율을 계산한 값이므로 개인수준의 출산력을 계산한 통계청의 값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0.69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1.71명으로 그 격차는 1.02명이었다. 이것은 출산력의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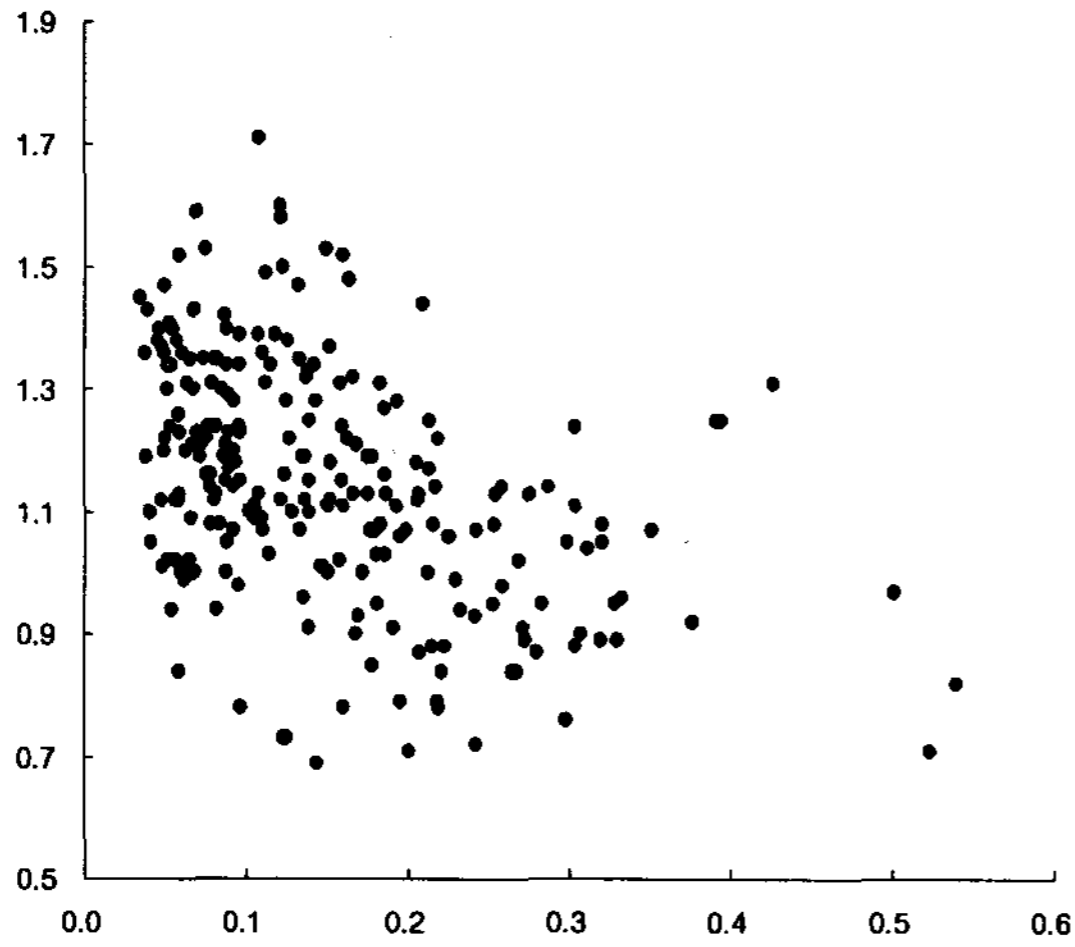
양성평등 관념은 가장 낮은 지역이 0.35, 가장 높은 지역이 0.83이었다. 양성평등 관념의 평균은 0.57로 상대적으로 매우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또 그 값이 1.00을 넘는 지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양성평등 관념이 높다는 식의 설명이 가능하다. 임

<표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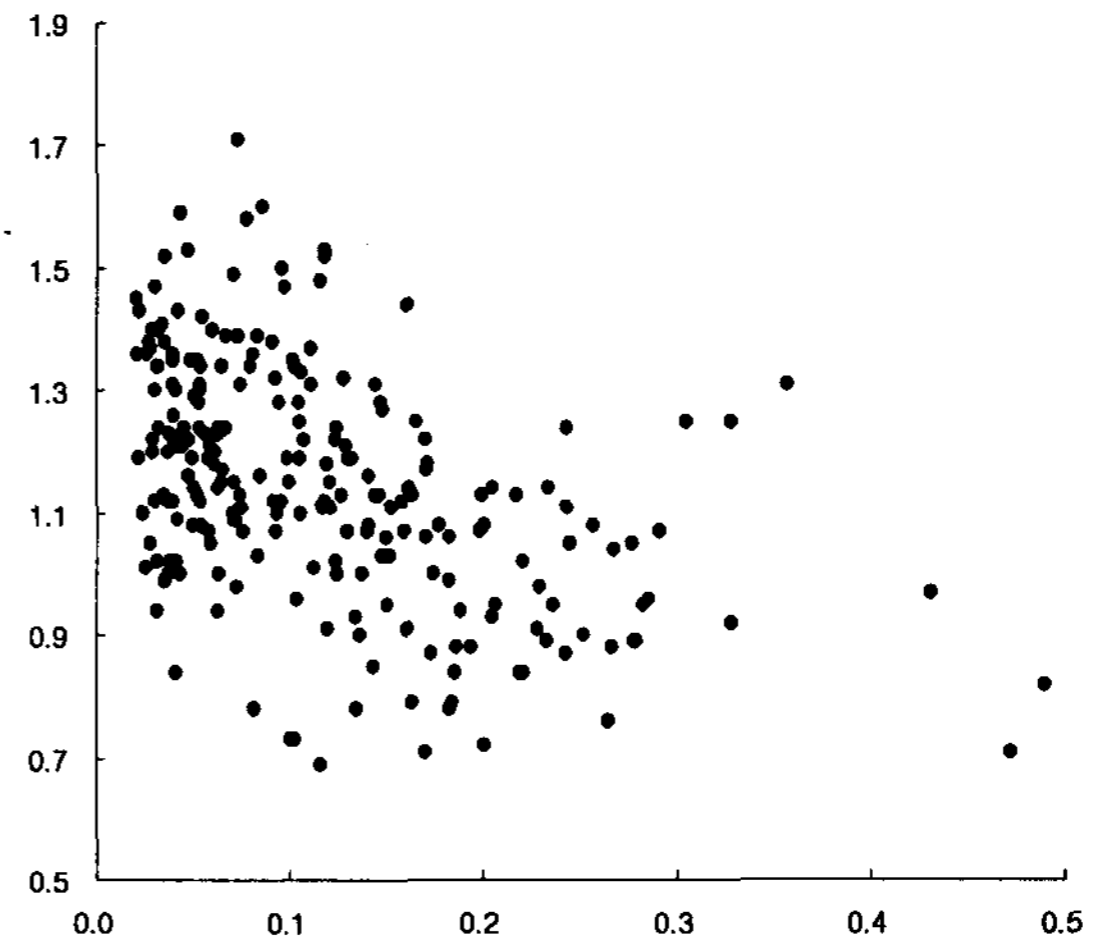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합계출산율	234	0.69	1.71	1.15	0.20
양성평등 관념	234	0.35	0.83	0.57	0.12
임시 및 일용직비(로그값)	234	-0.25	3.22	1.14	0.51
유배우비	234	41.13	79.74	62.28	6.50

<그림 2> 양성평등 관념과 교육 관련 변수의 합계출산율에 대한 산점도,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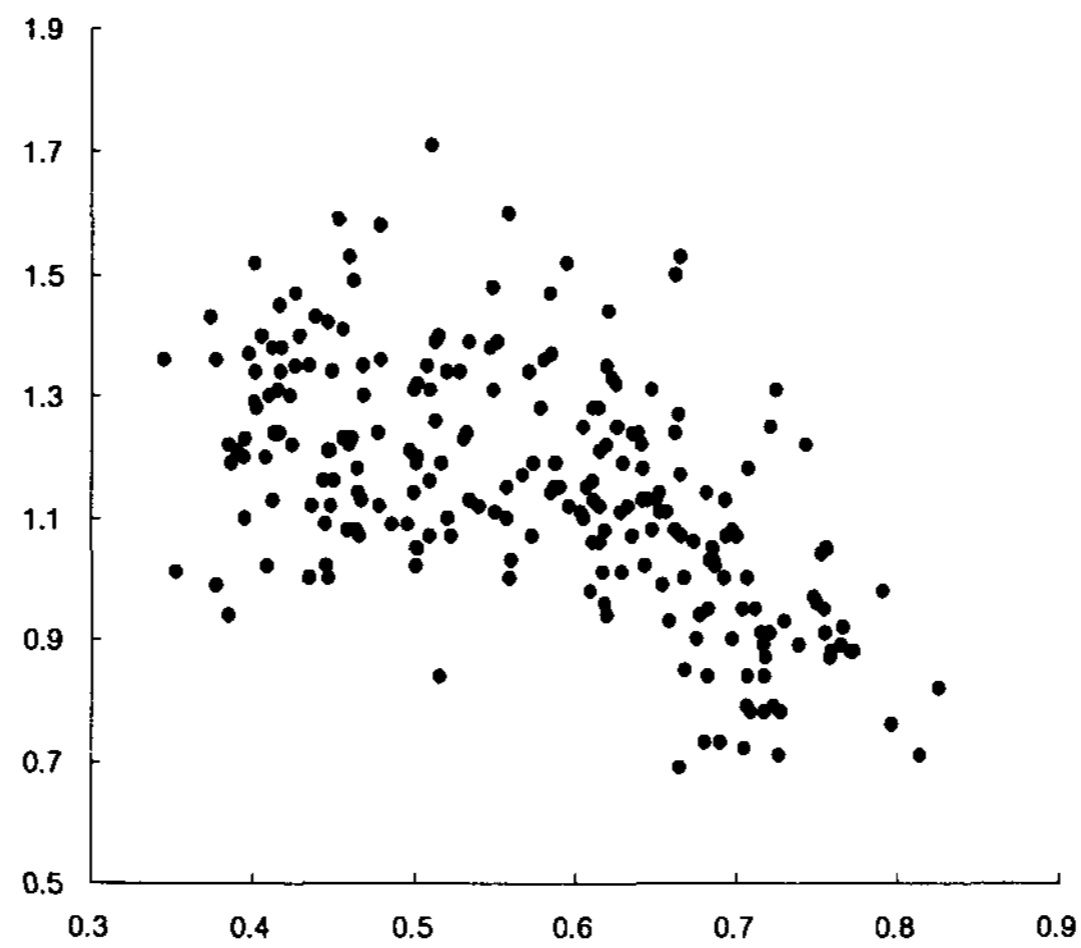
가. 교육수준과 합계출산율



나. 여성의 교육수준과 합계출산율



다. 양성평등 관념과 합계출산율



시 및 일용직비는 가장 낮은 지역이 음의 값을 지니는 -0.25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3.22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직비가 음의 값을 갖는 것은 로그를 취하기 전에 1% 보다 작은 값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임시 및 일용직비의 평균은 1.14였다. 유배우비의 경우에는 백분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변수에 비해 그 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 20-49세 사이의 유배우비는 평균이 62.28%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41.13%, 가장 높은 지역은 79.74%였다.

양성평등 관념은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새로이 측정된 변수이다. 따라서 교육수준과 변수

의 차별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 관념을 교육관련 변수들과 함께 합계출산율에 대한 산점도를 그려봄으로써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림 2>는 지역의 교육수준, 여성의 교육수준, 양성평등 관념을 각각 합계출산율(Y축)에 대한 분포로 산점도를 그려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각 변수의 교육은 각 지역의 만 2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합계출산율에 대한 각 지역의 교육수준과 여성의 교육수준의 산점도를 그려본 결과 아주 근사한 차이를 보일 뿐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과 여성의 교육수준은 가로축의 범위만 다소 좁혀졌을 뿐 별 다른 차이를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림 2>의 하단에 위치한 합계출산율에 대한 양성평등 관념의 산점도는 교육수준 및 여성의 교육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 및 여성의 교육수준의 산점도에서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여 이상점의 성격을 갖던 지역이 양성평등 관념의 산점도에서는 타 지역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성평등 관념은 남녀 각각의 대졸구성비를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로 계산함으로써 교육수준이 일정부분 상쇄되고 대신 성별에 의한 차이를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성평등 관념이 높은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높다는 형태의 일반화된 설명이 가능하며, 양성평등 관념이 교육수준 및 여성의 교육수준과 다른 측면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주요 변수의 구·시·군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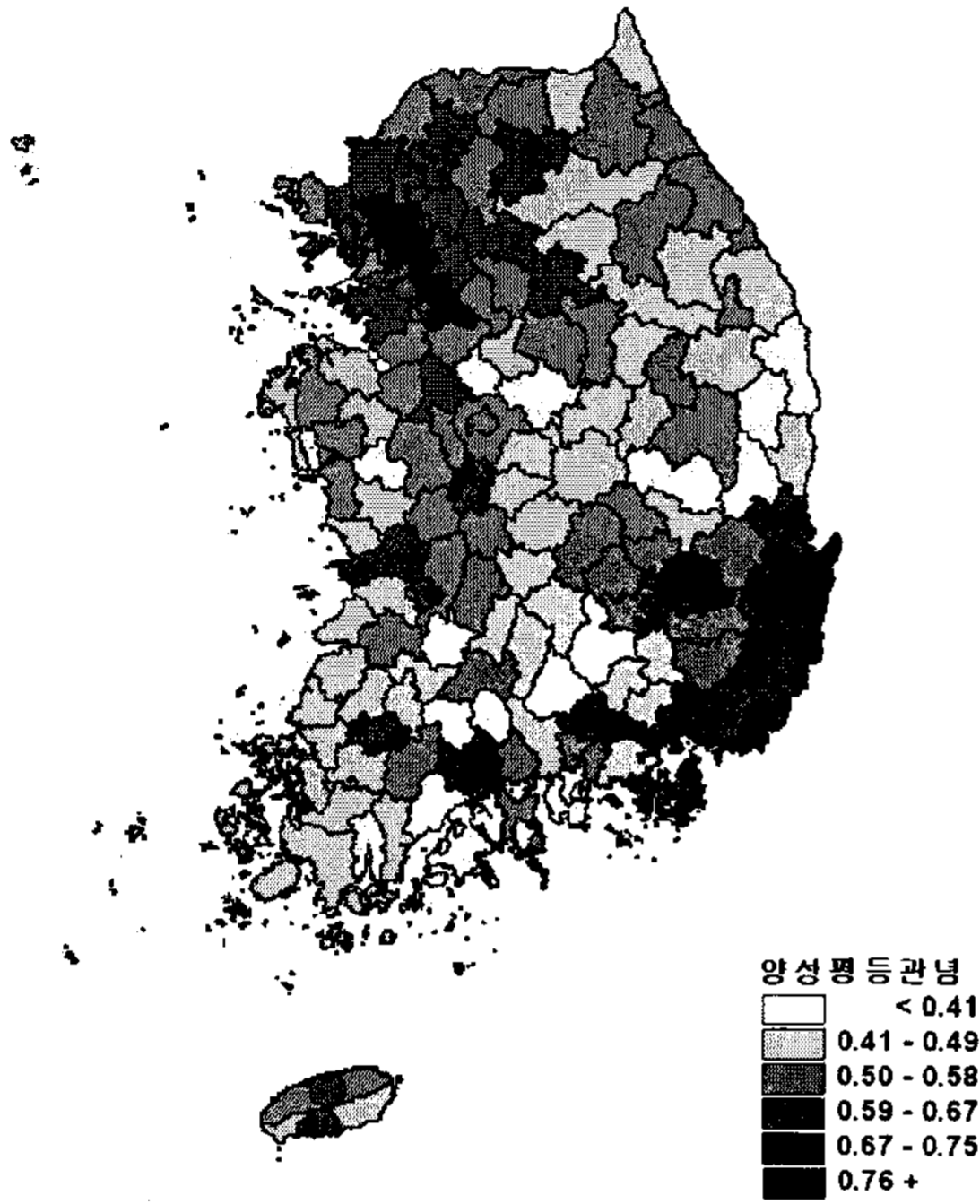
주요 변수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고 그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GIS를 이용하여 각 변수의 구·시·군별 분포를 확인하였다(<그림 3> 참조).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이유로 비교적 최근에 승격된 계룡시와 증평군이 제외되어 있다. 그림에서 진한 색으로 표현되는 지역이 해당 변수의 값이 높은 지역이며, 상대적으로 밝은 색으로 표현되는 지역은 값이 낮은 지역을 나타낸다.

먼저 양성평등 관념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남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광역시 지역이 매우 진한 색으로 표현되어 높은 양성평등 관념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서에서 북동의 대각선 방향에서 낮은 양성평등 관념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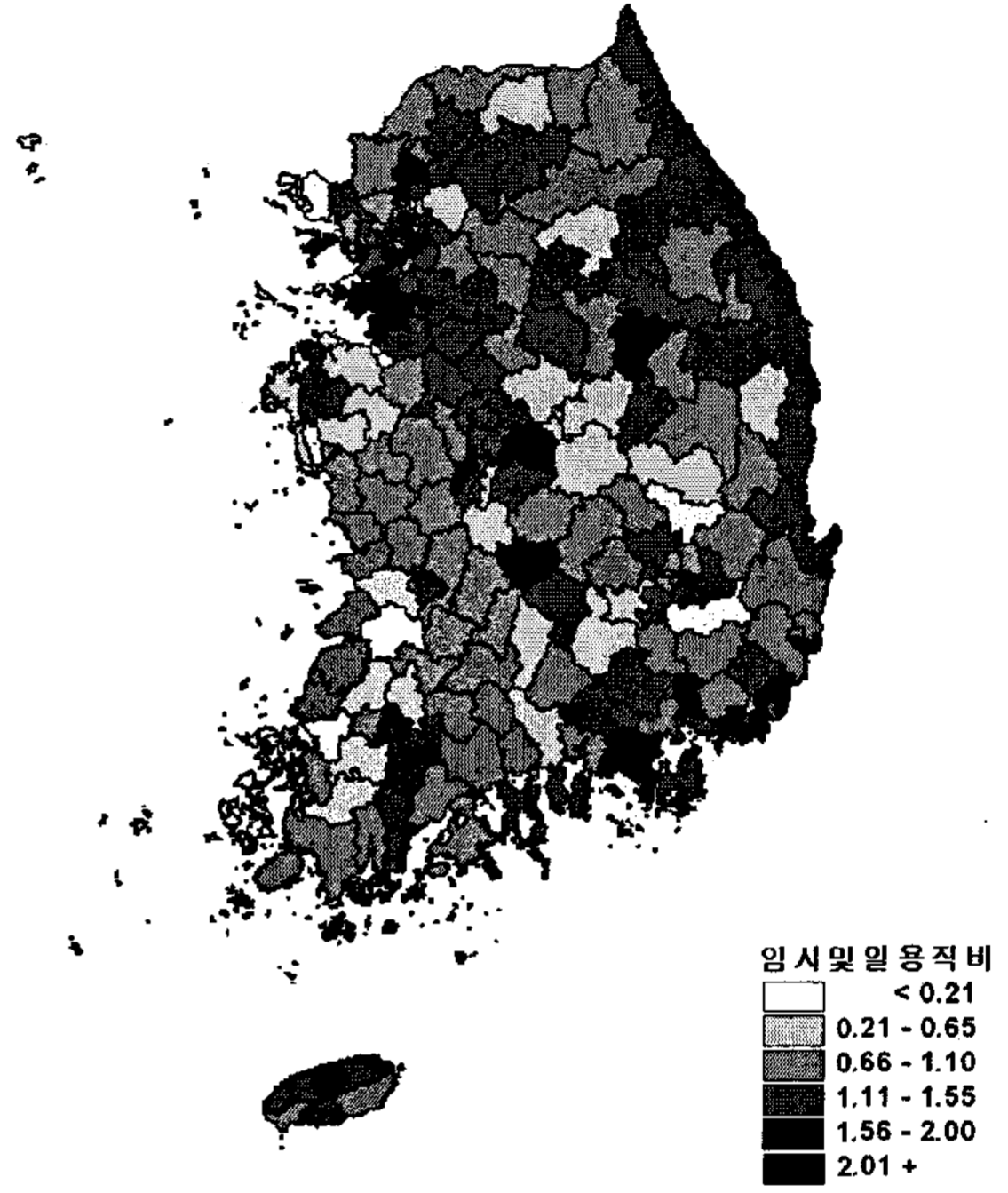
임시 및 일용직비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도시 지역에서 진한 색을 확인할 수 있지만, 동해안을 비롯하여 그 밖의 일부 지역에서도 다소 진한 색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지역은 동해안 지역과 제주, 그리고 전북 무주군, 충북 단양군 등 관광지의 성격을 갖는 지역이다. 비정규직이 많은 관광업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그림 3> 구·시·군별 주요 변수의 분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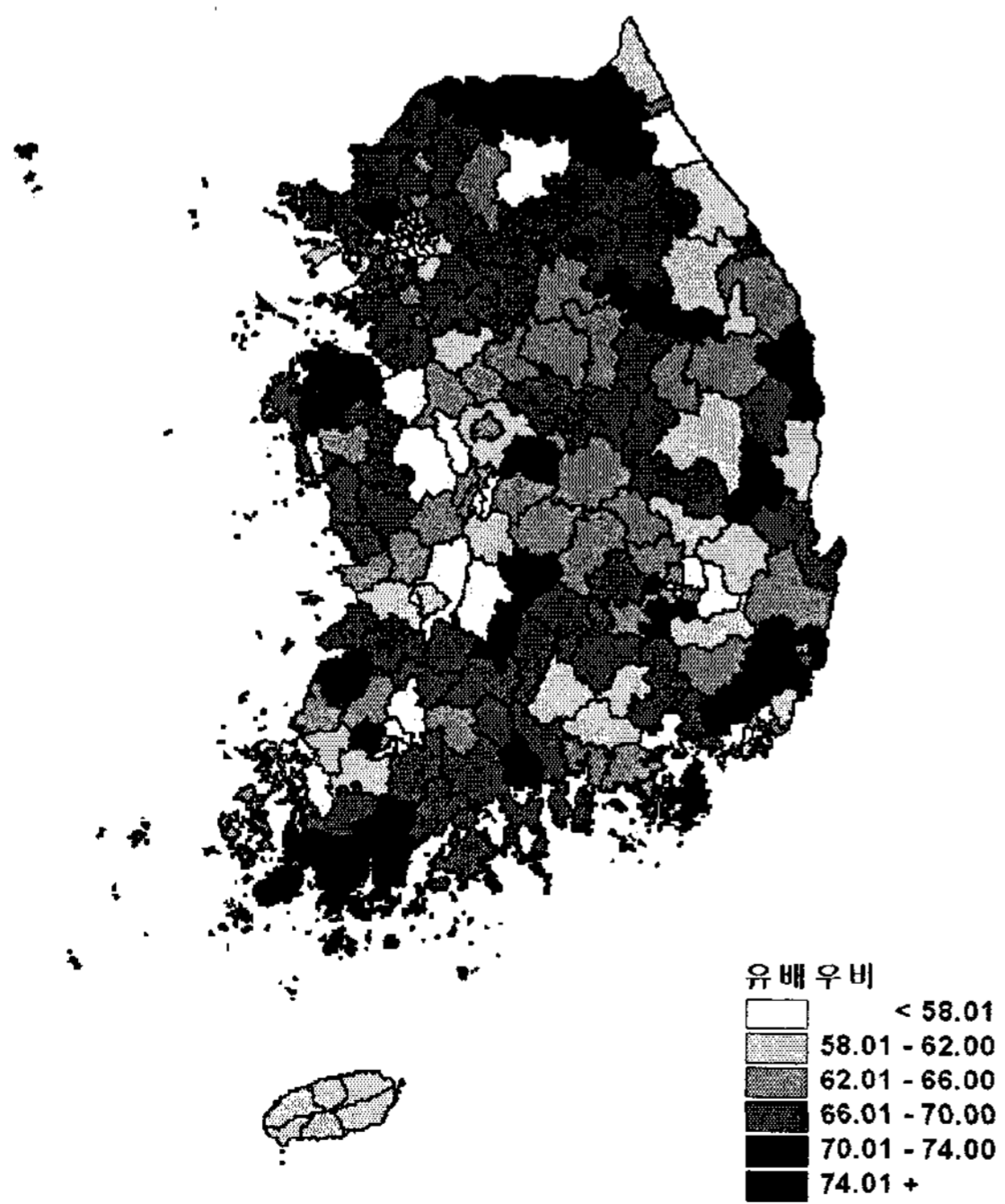
가. 양성평등 관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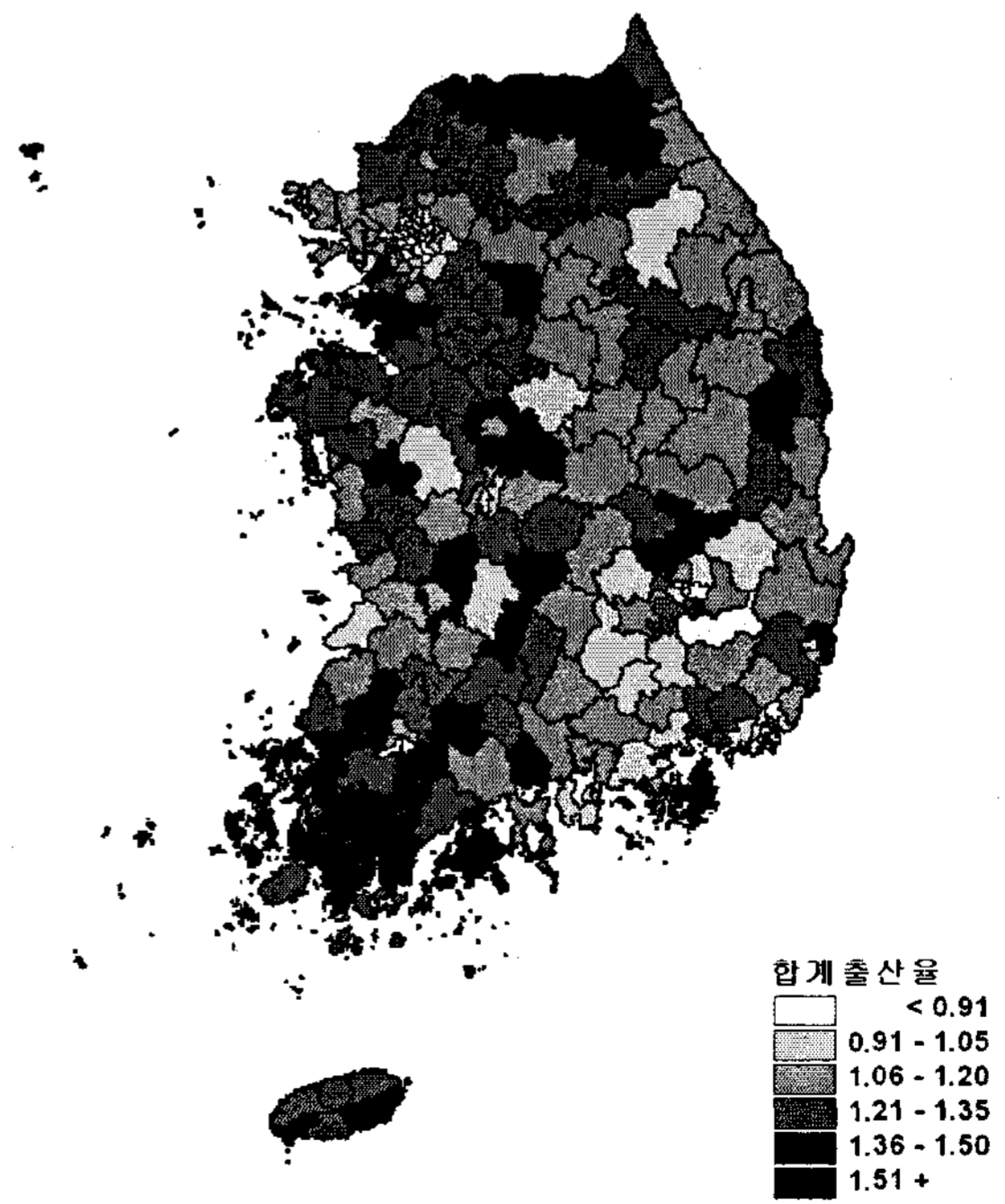
나. 임시 및 일용직비



다. 유배우비



라.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2006).

다소 진한 색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배우비의 분포는 면적이 좁은 서울,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지역에 밝은 색이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지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대도시 지역의 매우 낮은 유배우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 외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아산시, 전북 완주군, 진안군 등 일부 지역에서도 밝은 색으로 표현된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진하게 표현된 지역은 주로 전라남도 및 강원 북부, 남동해안 지역 등 대체로 농촌지역과 상대적으로 군인 및 대기업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었다. 군인과 대기업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직업의 안정성이 높은 유배우비를 형성하는 바탕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합계출산율은 유배우비와 유사하게 휴전선 인근의 강원도 북부와 전라남도, 제주도 남부 지역에서 진한 색을 나타내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모두 합계출산율 상위 지역으로, 비교적 군인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거나 농어촌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과 군인이라는 안정적인 직업특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력을 보이는 원인으로 여겨진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대도시 중심지역은 차지하는 면적이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출산력 수준으로 인해 밝은 색으로 표현되고 있다. 유배우비와 합계출산율의 분포는 전라남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 등 진하게 표현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 3. 상관관계와 분산분석

여기에서는 경로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각 변수들의 구분에 의한 합계출산율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각 경로의 방향과 크게 일치한다(<표 3> 참조). 양성평등 관념과 합계출산율은 높은 부적 상관을 갖고 있으며, 임시 및 일용직비 역시 합계출산율과 부적 상관을 갖고 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 관념과 임시 및 일용직비 모두 합계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

<표 3>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합계출산율	양성평등 관념	임시 및 일용직비	유배우비
합계출산율	1.00			
양성평등 관념	-.57 **	1.00		
임시 및 일용직비	-.34 **	.47 **	1.00	
유배우비	.69 **	-.53 **	-.34 **	1.00

주: \*\*:  $p < 0.01$ .

<표 4> 주요 변수의 수준에 따른 합계출산율의 분산분석

변 수	구 분	사례수	합계출산율
양성평등 관념	낮은 지역	72	1.25
	중간 지역	91	1.20
	높은 지역	71	0.97
	F 비		63.43 **
임시 및 일용직비	낮은 지역	70	1.20
	중간 지역	85	1.15
	높은 지역	78	1.09
	F 비		6.44 **
유배우비	낮은 지역	66	0.98
	중간 지역	74	1.16
	높은 지역	94	1.25
	F 비		56.58 **

주: \*\*:  $p < 0.01$ .

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 관념과 유배우비는 -0.53, 임시 및 일용직비와 유배우비는 -0.34의 부적 상관을 갖고 있다. 양성평등 관념과 임시 및 일용직비는 합계출산율 뿐만 아니라 유배우비에도 유사한 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인다.

반면 유배우비와 합계출산율은 0.69의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갖고 있다.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유배우비가 합계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일치한다. 양성평등 관념과 임시 및 일용직비가 정적 상관(0.47)을 갖는 것은 두 변수가 유배우비에 대해 갖는 각각의 인과관계로 인한 의사관계(spurious relation)로 판단된다.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0.01 유의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값을 갖는다.

양성평등 관념, 임시 및 일용직비, 유배우비를 각각 값이 낮은 지역부터 중간 지역, 높은 지역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각 집단에 따른 합계출산율 평균과 F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양성평등 관념은 대체로 그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합계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시 및 일용직비 역시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합계출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양성평등 관념과 임시 및 일용직비는 모두 합계출산율에 대해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갖고 있다. 유배우비의 경우에는 반대로 값이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유의미하게 높은 합계출산율을 갖는다. 가족형성이 제한되거나 해체되는 경향이 높은 지역일수록 합계출산율도 함께 낮아지는 정적 관계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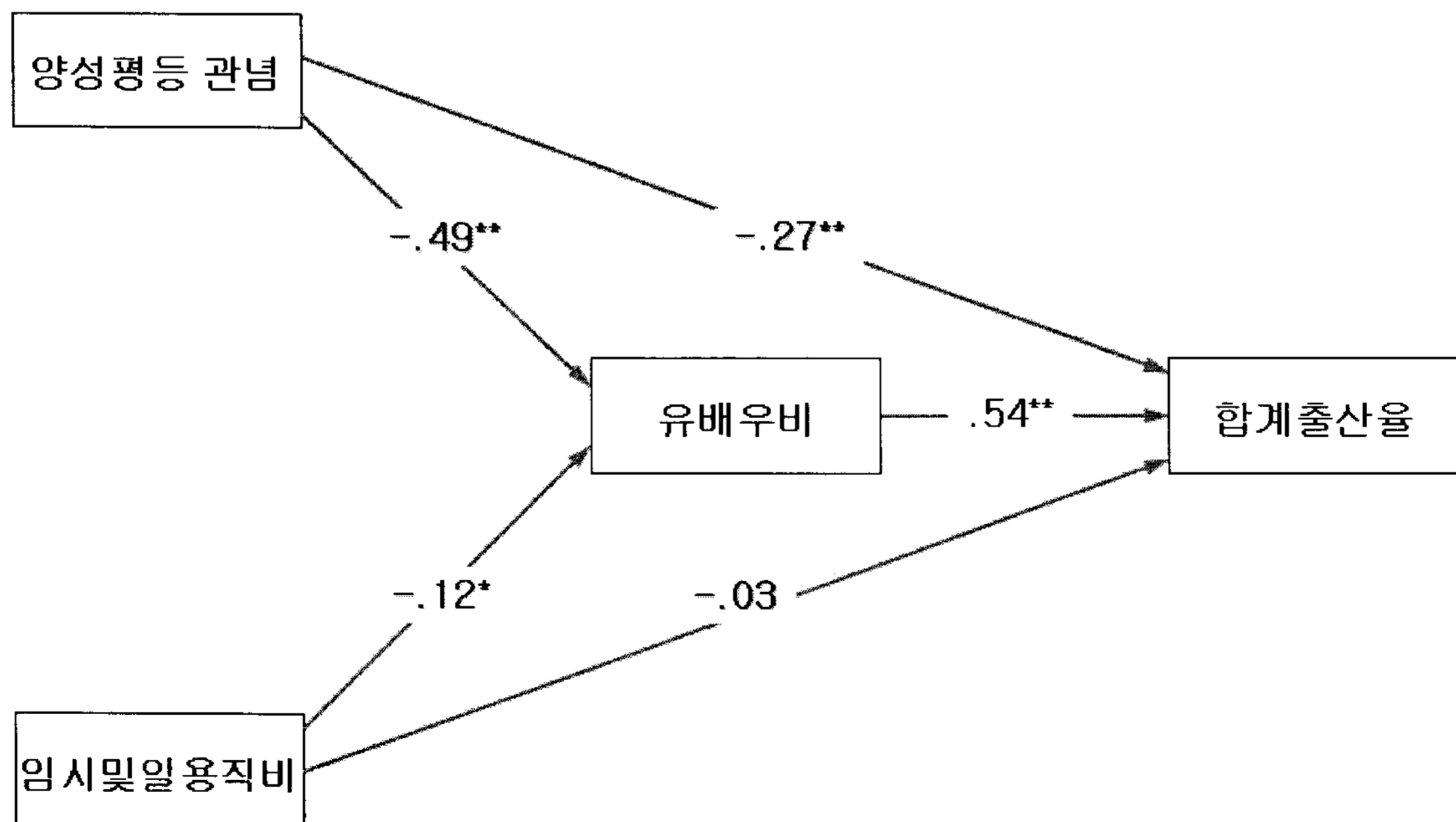
양성평등 관념, 임시 및 일용직비, 유배우비의 구분에 따른 합계출산율 차이는 전체적으로 이 논문이 설정한 기본가설과 크게 일치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 4. 경로분석

먼저 분석모형을 토대로 전국 구·시·군 234개 지역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의 인과구조를 검증하였다. 각 경로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경로계수를 이용하여 <그림 4>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 관념과 임시 및 일용직비는 모두 유배우비를 낮추고 있다. 두 변수는 모두 유배우비에 대해 유의미한 부적 경로를 갖고 있으며, 그 크기는 양성평등 관념이 임시 및 일용직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관념은 유배우비를 크게 낮추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유배우비에 대한 임시 및 일용직비의 영향력이 양성평등 관념에 비해 더 낮은 것은 대도시 등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배우비는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정적 경로를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양성평등 관념과 임시 및 일용직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모두 부적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임시 및 일용직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예상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임시 및 일용직비는 합계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유배우비를 방해하는 형태로 출산력을 낮추고 있다. 임시 및 일용직비가 합계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측정에 ‘실업’요인이 배제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림 4> 지역별 차별출산력의 경로분석 결과



주: \*,  $p < 0.05$ , \*\*,  $p < 0.01$ .

<표 5> 경로분석 결과의 효과분해

	공변량	비인과효과	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양성평등 관념 → 유배우비	-.53	-.04	-.49		-.49
임시 및 일용직비 → 유배우비	-.34	-.22	-.12		-.12
양성평등 관념 → 합계출산율	-.57	-.04	-.27	-.26	-.53
임시 및 일용직비 → 합계출산율	-.34	-.24	-.03	-.07	-.10
유배우비 → 합계출산율	.69	.15	.54		.54

분석모형에는 양성평등 관념과 임시 및 일용직비가 유배우비를 거쳐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 관념, 임시 및 일용직비, 그리고 유배우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효과를 분해하여 공변량과 함께 <표 5>에 제시하였다.

양성평등 관념과 임시 및 일용직비는 모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낮추고 있다. 전체효과를 통해 두 변수를 비교해 보면 양성평등 관념이 임시 및 일용직비에 비해 더 큰 효과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 관념은 합계출산율에 대해 임시 및 일용직비 보다 큰 직접효과를 갖으며, 비슷한 크기의 간접효과도 가지고 있다. 유배우비는 합계출산율에 대해 가장 큰 전체효과를 갖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 내에서 이루어지며, 출산력이 가족형성 및 해체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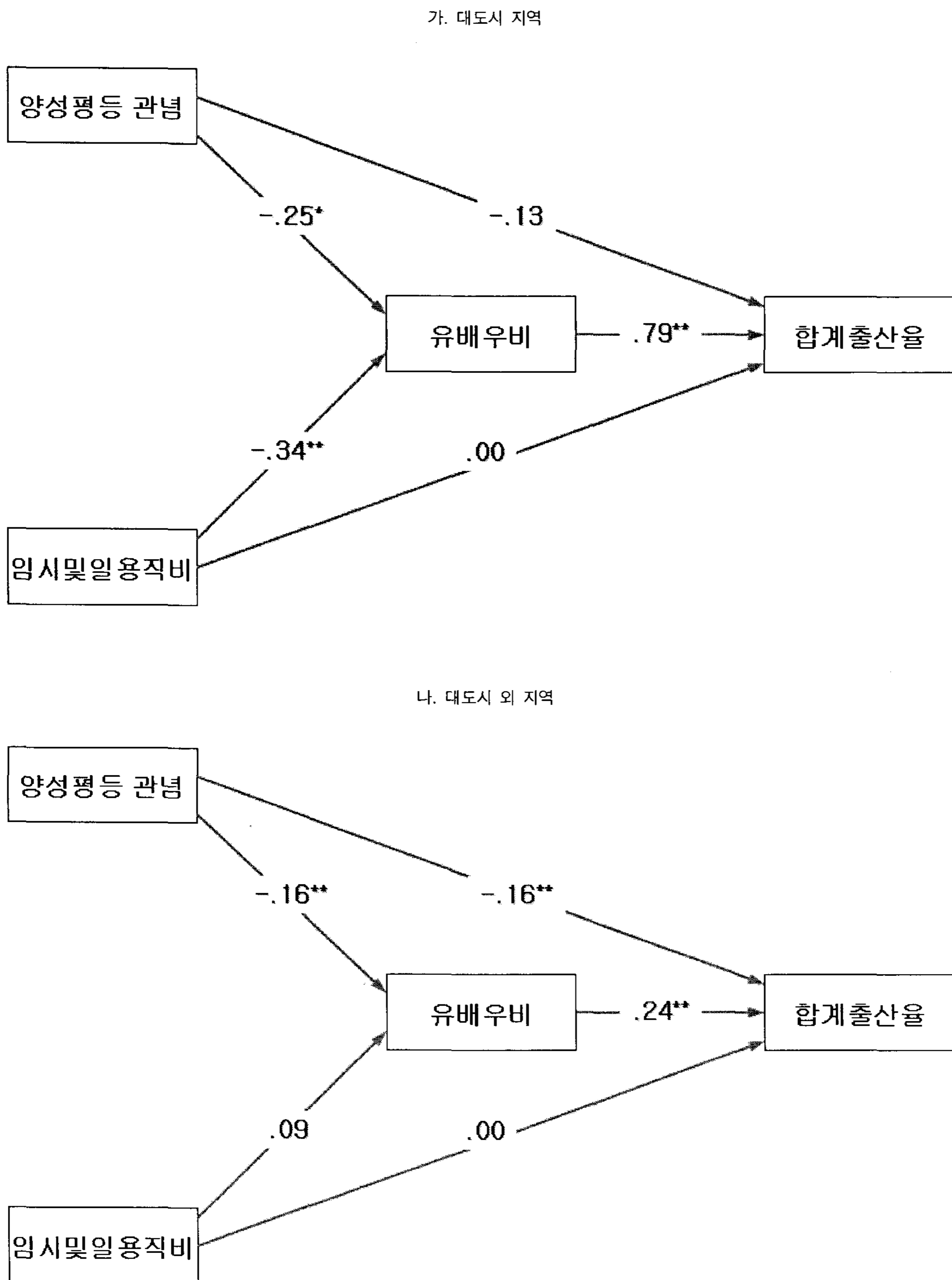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한국의 저출산은 양성평등 관념이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낮추고 노동시장 불안정성 역시 가족형성을 방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출산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이어지는 대도시 지역의 분석을 통해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출산력에 대한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이 논문이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가설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대도시 지역의 초저출산 인과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대도시 지역과 대도시 외 지역을 구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대도시 지역 역시 양성평등 관념과 임시 및 일용직비 모두 유배우비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앞의 결과와 다르게 임시 및 일용직비가 양성평등 관념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양성평등 관념과 임시 및 일용직비 모두 합계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유배우비에서 합계출산율로 향하는 경로(0.79)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대도시 외 지역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관념이 유배우비와 합계출산율에 이르는 경로는 유



<그림 5> 대도시 지역과 대도시 외 지역의 경로분석 결과



주: \*:  $p < 0.05$ , \*\*:  $p < 0.01$ .

의미하였고, 임시 및 일용직이 유배우비와 합계출산율에 이르는 경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임시 및 일용직은 대도시 외 지역에서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두 지역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면, 양성평등 관념이 합계출산율에 이르는 직접경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로계수에서 대도시 지역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출산력에 대해 갖는 효과가 대도시 외 지역 보다 대도시 지역에서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분석과정에서 양성평등 관념은 강한 영향력을 고르게 보여주고 있다. 양성평등 관념은 지역에 관계없이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에서 일관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대도시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에서 가족형성을 낮추는 영향력은 양성평등 관념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대도시 지역에 크게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비정규직, 실업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산업이 발달한 도시 지역,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에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낮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지역수준의 횡단적 분석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대도시 지역의 출산력 저하를 크게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지역의 출산력은 주로 매개변수인 가족형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가족형성을 방해하는 정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즉 대도시의 초저출산은 주로 가족형성의 지연과 해체에 의해 영향 받고 있다. 대도시 지역에서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출산력에 대해 갖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출산이 주로 혼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도시의 초저출산은 여성들의 '출산과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회피하고 연기하는 많은 '싱글들'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양성평등 관념, 노동시장 불안정성 그리고 가족형성 요인은 각각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 관념은 출산력 저하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초저출산 현상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대도시의 초저출산은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가족형성을 크게 낮추는 것에 의해 매우 크게 영향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가족형성과 작용하여 출산력 저하를 초래하는 제2차 출산력변천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 V. 결론

한국의 출산력변천은 1980년대 중반을 전후로 제1차 출산력변천과 제2차 출산력변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차 출산력변천은 저출산이 그 특징이며 제1차 출산력변천과는 다른 인과구조를 갖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를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배경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를 지역의 차별출산력과 함께 설명하기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2차 출산력변천 이론을 도입하였다.

양성평등 관념, 노동시장 불안정성, 가족형성의 세 가지 요인을 통해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이 요인들의 차이에 따라 지역의 차별출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 대도시의 초저출산은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5년 전국 구·시·군 234개 지역의 지역수준 자료를 사용하였고, 자료는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2005년 인구센서스와 동태통계, 200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이 활용되었다. 관련 지표가 부족한 양성평등 관념의 경우 성별 교육수준의 비를 통해 새로이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지역의 임시 및 일용직비, 가족형성의 요인은 특정 연령대의 유배우비를 사용하였고, 출산력 수준은 지역의 합계출산율을 사용하였다.

지역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금까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 크게 개선된 지역별 자료를 이용해 제한적이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은 지역의 합계출산율을 주요 변수들과 함께 GIS로 제시함으로써, 출산력의 지역별 편차와 분포는 물론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를 검증하고 일반화된 설명을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국과 대도시 지역의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 가족형성과 출산력이 낮아지고, 가족형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력도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평등 관념은 지역 구분에 관계없이 일관된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고, 반면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출산력은 매개변수인 가족형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초저출산은 가족형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에서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을 매개로 하여 출산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의 저출산 현상을 이끌고 있다. 양성평등 관념은 이 과정에서 큰 흐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대도시 지역에서 초저출산 현상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의 인과구조를 검증하고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확인하고자 했던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와 한계를 지닌다. 이론적 논의에 머물러 있던 제2차 출산력변천을 지역수준의 양적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제2차 출산력변천 이론을 지지함과 동시에 실증연구의 가능성을 제공하였고,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그동안 저출산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던 양성평등 관념이 제2차 출산력변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종단적 연구를 시도할 수 없었고, 일부 변수의 사용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 관련 자료의 개발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출산력 연구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두섭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1(1): 23-53.
- 김두섭·강남준 (2000),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나남.
- 김두섭·송유진 (2006), 『IMF 경제위기가 한국사회의 출산수준 및 인과구조에 미친 영향』,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 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5), 『출산력 저하의 원인: 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고령화 및미래사회위원회.
- 문유경·이미정·장미혜·최선화 (2005),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전략개발 및 양성평등지표의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이삼식·신인철·조남훈·김희경·김희경·정윤선·최은영·황나미·서문희·박세경·전광희·김정석·박수미·윤홍식·이성용·이인재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30(2).
- 장원규 (2003), “젠더 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정책의 변천 과정과 발전 과제”, 『교육학연구』 41(4): 389-409.
- 통계청 (2006), 『KOSIS(한국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통계청.

- Atoh, Makoto (2001), "Very Low Fertility in Japan and Value Change Hypotheses",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10(1): 1-21.
- Chesnais, Jean-Claude (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729-739.
- Davis, Kingsley (1986), "Low Fertility in Evolutionary Perspectiv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2(1): 48-65.
- Kim, Doo-Sub (2005), "Theoretical Explanations of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3(1): 2-25.
- McDonald, Peter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40.

유삼현은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저출산 및 출산력 변천, 국제결혼, 인구고령화 등이다.

Email: shyoo@hanyang.ac.kr

## On Regional Fertility Differentials: Understanding the Causal Mechanisms of Low Fertility in Korea

Sam-Hyun Yoo

*Institute of Population and Aging Research*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mechanisms of low fertility and regional differentials in Korea. Utilizing the 2005 census and the 2005 vital statistics, and labor statistics at the regional level, major variables were calculated for administrative units of 234 'Gu's, 'Si's and 'Gun's. Gender equity orientation, labor market insecurity and family formation were hypothesized as key factors of recent decline in Korean fertility. This study first presents four maps of gender equity orientation, labor market insecurity, family formation and fertility. Then ANOVA and path analysis were carried out in an effort to generalize the causal mechanisms. Results of analysis reveal that gender equity orientation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second fertility transition in Korea. In metropolitan regions, however, labor market insecurity i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evel of family formation and fertility. Family formation also turns out to be an important intermediate variable of fertility.

**Key Words:** low fertility, fertility transition, regional fertility differentials, gender equity, labor market, family formation